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1년 4월 광공업·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
 - 2011년 4월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 전기장비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함.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 교육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금융·보험,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보건·사회복지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20.6%), 자동차(8.5%), 기계장비(10.4%)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영상음향통신(-18.2%), 전기장비(-5.7%), 화학제품(-2.0%) 등의 부문에서는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9.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7.4%), 보건·사회복지(4.5%), 도매·소매(4.3%), 운수(3.5%) 등의 부문에서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임대(-16.1%), 교육(-0.1%) 등의 부문에서는 감소함.
 - 2011년 4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한 반면,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7%)는 감소하였으나 컴퓨터·통신기기, 승용차 등 내구재(15.7%), 의복 등 준내구재(7.2%)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함.
 - 설비투자는 산업용운반기계 등 기계류 투자는 늘었으나 승용차,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종별로는 건축공사(주거용),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 실적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하였으며, 건설수주(경상)도 공공부문에서 치산·치수 및 주택 등과 민간부문에서의 발전·송전 등의 발주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5로 전월보다 0.7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1.1%로 전월보다 0.5%p 하락함.

◆ 2011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4.1% 상승(생활물가지수 3.6% 상승)

○ 2011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변동이 없으나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하여 2011년 1월 4.1% 상승 이후 5개월 연속 4% 대 상승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부문만 1.1% 하락하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교통,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부문, 주거 및 수도·광열 부문에서 각각 6.4%, 6.2%, 4.9%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8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p	4월	1/4	4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9.5	10.6	6.9(-1.5)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7	20.1	10.8	7.1(1.0)
	출하	8.9	6.6	5.3	-10.1	2.4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4	16.5	11.9	7.3(-1.7)
	내수	5.3	1.7	1.7	-11.0	-0.7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15.5	7.2	2.2(-4.3)
	수출	14.3	14.3	10.3	-8.8	7.1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2	18.0	18.4	14.3(-2.2)
	서비스업생산	6.4	4.8	3.2	-0.4	3.4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3.8	2.6	3.1(0.0)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6	7.3	5.1	5.0(-1.1)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5.1	32.5	6.6	-1.1(-5.7)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9	2.7	2.6	2.9	3.6	2.9	2.7	4.5	4.1(0.0)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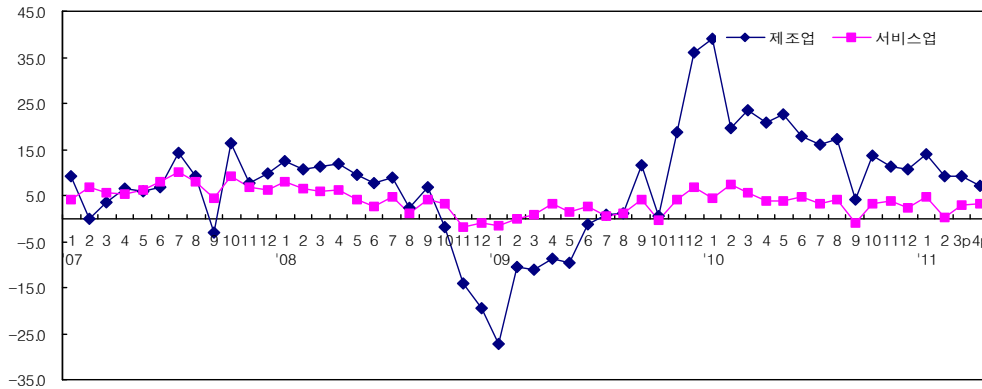
3) 물가지수는 5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 2011년 4월 생활물가지수는 122.3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품 부문은 전월대비 1.8% 하락,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함.
- 2011년 4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9.0% 하락,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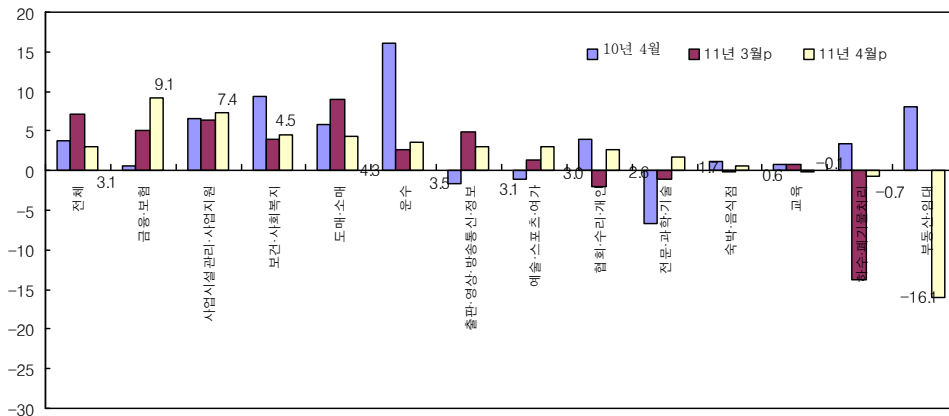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2011.5), 『2011년 4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1년 5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48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1천 명(1.5%)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795천 명으로 161천 명(1.1%)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84천 명으로 220천 명(2.1%) 증가하였음.
- 2011년 5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3.8%)은 전년동월대비 0.0%p, 여성(51.0%)은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그림 3 좌측 참조)
- 2011년 5월 중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1.2%로 전년동월대비 0.0%p, 여성의 고용률은 49.5%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그림 3 우측 참조)
- 2011년 5월 중 취업자는 24,66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5천 명(1.5%)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28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1천 명(1.2%)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3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4천 명(1.8%)이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 2011년 5월 중 실업자는 81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 명(3.3%)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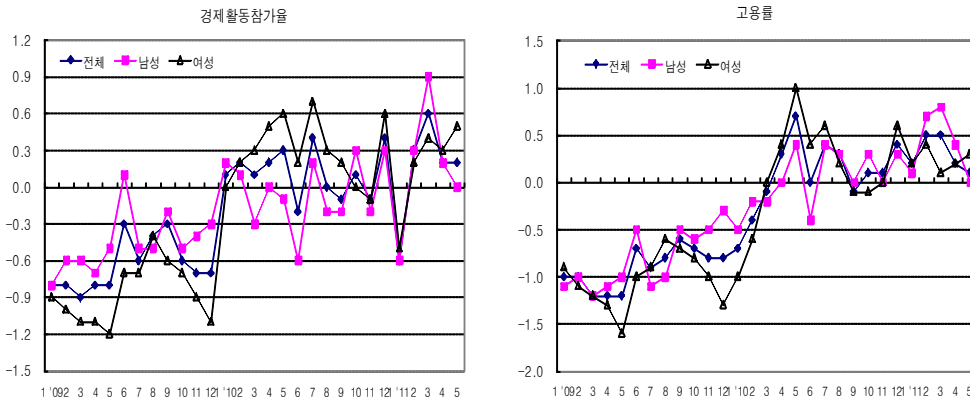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2011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4/4분기		4월	5월		
경제활동인구	24,448 (0.2)	24,166 (1.5)	25,038 (1.5)	25,099 (1.8)	24,993 (1.4)	24,796 (1.4)	24,488 (1.3)	25,240 (1.5)	25,480 (1.5)	
참가율	60.7	59.8	61.8	61.9	61.5	60.8	59.9	61.6	62.1	
취업자	23,631 (0.0)	23,037 (0.6)	24,170 (1.8)	24,306 (2.5)	24,120 (1.6)	23,989 (1.5)	23,459 (1.8)	24,303 (1.6)	24,661 (1.5)	
고용률	58.7	57.0	59.6	60.0	59.3	58.9	57.4	59.3	60.1	
실업자	817	1,130	868	793	873	808	1,028	936	819	
실업률	3.3	4.7	3.5	3.2	3.5	3.3	3.9	3.7	3.2	
비경제활동인구	15,829 (3.0)	16,254 (1.0)	15,493 (1.0)	15,434 (0.4)	15,656 (0.8)	15,962 (0.3)	16,392 (0.8)	15,713 (0.5)	15,523 (0.6)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1. 6), 『2011년 5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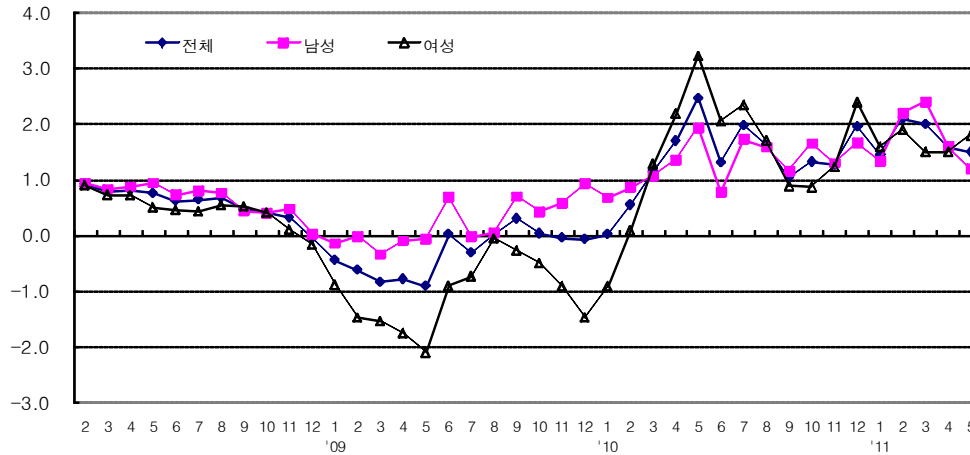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5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 명(-2.0%) 감소, 여성 실업자는 31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 명(13.1%) 증가
 - 실업률은 남성이 3.4%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 여성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
- 2011년 5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52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9천 명(0.6%)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25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5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26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 명(0.1%) 증가하였음.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5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 명 증가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3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8천 명(15.1%) 증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 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76천 명으로 65천 명(-1.5%)이 감소

◆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2011년 5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01천 명, 2.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41천 명, 2.9%), 전기·운수·통신·금융업(93천 명, 3.3%), 농림어업(27천 명, 1.5%)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5천 명, -1.3%), 건설업(-27천 명, -1.5%)에서는 감소
 - 2010년 이래 제조업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2011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전 산업	23,631 (0.0)	23,037 (0.6)	24,170 (1.8)	24,306 (2.5)	24,120 (1.6)	23,989 (1.5)	23,459 (1.8)	24,303 (1.6)	24,661 (1.5)
농림어업	1,579 (-6.9)	1,235 (-11.7)	1,733 (-4.6)	1,750 (-4.7)	1,754 (-2.5)	1,544 (-2.2)	1,207 (-2.3)	1,642 (0.8)	1,777 (1.5)
제조업	3,862 (-1.2)	3,911 (1.6)	4,015 (4.5)	4,036 (4.9)	4,053 (6.9)	4,131 (7.0)	4,139 (5.8)	4,108 (2.9)	4,137 (2.5)
건설업	1,704 (-5.9)	1,644 (-3.6)	1,816 (2.5)	1,814 (2.6)	1,791 (5.4)	1,761 (3.3)	1,641 (-0.2)	1,735 (-3.2)	1,787 (-1.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11 (-2.6)	5,532 (-1.0)	5,461 (-1.3)	5,526 (0.1)	5,443 (-1.2)	5,442 (-1.3)	5,471 (-1.1)	5,448 (0.2)	5,452 (-1.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149 (4.6)	7,859 (3.2)	8,294 (3.9)	8,327 (4.7)	8,244 (0.9)	8,234 (1.0)	8,097 (3.0)	8,438 (2.7)	8,568 (2.9)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02 (1.8)	2,834 (4.1)	2,831 (2.4)	2,832 (2.1)	2,816 (2.3)	2,855 (1.9)	2,880 (1.6)	2,916 (2.7)	2,925 (3.3)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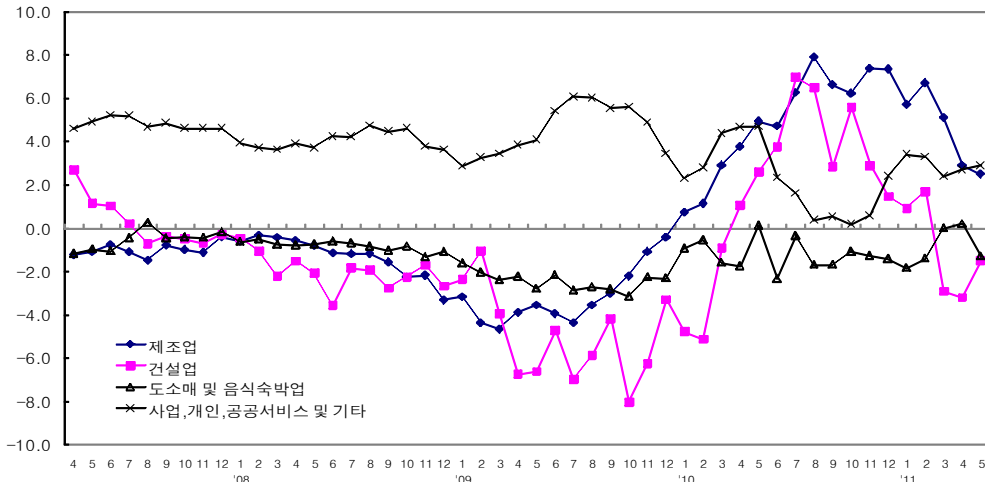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1. 6), 『2011년 5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자영업자 감소 추세 지속

○ 2011년 5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03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천 명(-0.2%)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62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2천 명(2.2%)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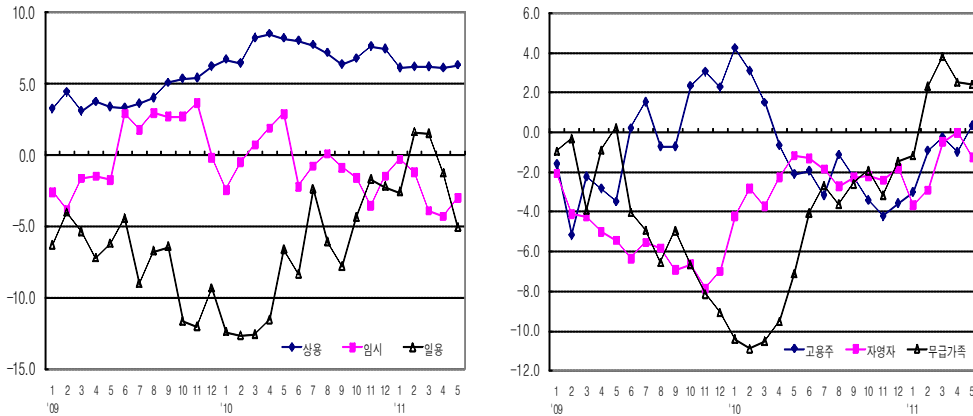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708천 명으로 630천 명(6.3%)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64천 명으로 159천 명(-3.0%)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854천 명으로 99천 명(-5.1%)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일용직은 2개월째 순감소(그림 6 좌측 참조)
- 2010년 하반기 이후 고용주·자영업자는 음(-)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5월 들어 고용주는 소폭 증가하였고, 2011년 들어 무급가족종사자는 계속 증가하였음(그림 6 우측 참조)

○ 2011년 5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20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0.1%)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160천 명으로 320천 명(1.5%) 증가

- 18시간 미만 취업자 986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 명(-23.9%) 감소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2011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전 체	23,631 (0.0)	23,037 (0.6)	24,170 (1.8)	24,306 (2.5)	24,120 (1.6)	23,989 (1.5)	23,459 (1.8)	24,303 (1.6)	24,661 (1.5)
비임금근로자	6,952 (-5.3)	6,638 (-3.5)	7,023 (-2.6)	7,051 (-2.5)	6,994 (-2.4)	6,778 (-2.5)	6,542 (-1.5)	6,946 (0.2)	7,035 (-0.2)
자영업주	5,600 (-4.7)	5,514 (-1.9)	5,696 (-1.6)	5,709 (-1.4)	5,646 (-2.3)	5,514 (-2.6)	5,399 (-2.1)	5,642 (-0.3)	5,660 (-0.9)
무급가족종사자	1,292 (-7.9)	1,124 (-10.6)	1,327 (-6.9)	1,342 (-7.1)	1,348 (-3.0)	1,264 (-2.2)	1,143 (1.7)	1,304 (2.5)	1,374 (2.4)
임금근로자	16,678 (2.4)	16,398 (2.3)	17,148 (3.8)	17,255 (4.7)	17,126 (3.3)	17,211 (3.2)	16,917 (3.2)	17,357 (2.1)	17,626 (2.2)
상용근로자	9,621 (5.7)	9,808 (7.1)	10,060 (8.2)	10,078 (8.2)	10,158 (7.1)	10,320 (7.3)	10,413 (6.2)	10,618 (6.1)	10,708 (6.3)
임시근로자	5,167 (2.1)	4,892 (-0.7)	5,179 (0.8)	5,223 (2.9)	5,148 (-0.5)	5,052 (-2.2)	4,804 (-1.8)	4,928 (-4.3)	5,064 (-3.0)
일용근로자	1,891 (-11.1)	1,699 (-12.5)	1,909 (-8.8)	1,953 (-6.6)	1,820 (-5.4)	1,838 (-2.8)	1,701 (0.1)	1,812 (-1.3)	1,854 (-5.1)
36시간 미만	2,961 (4.5)	4,851 (56.9)	3,197 (6.7)	3,203 (6.5)	3,329 (-1.8)	3,090 (4.4)	3,246 (-33.1)	3,251 (-1.3)	3,200 (-0.1)
36시간 이상	20,404 (-0.7)	17,671 (-8.7)	20,705 (1.1)	20,840 (1.9)	20,362 (2.4)	20,620 (1.1)	19,739 (11.7)	20,775 (1.9)	21,160 (1.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1. 6), 『2011년 5월 고용동향』.

◆ 전년동월대비 고졸 실업률 증가

- 2011년 5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19세(5.7%, -2.2%p), 30대(3.2%, -0.3%p), 40대(2.0%, -0.2%p)에서 감소
 - 20대(7.4%, 1.1%p), 50대(2.1%, 0.1%p), 60세 이상(2.2%, 0.3%p)은 증가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고졸(3.6%, 0.2%p)에서는 증가하였고, 중졸 이하(2.2%, -0.1%p), 대졸 이상(3.3%, -0.1%p)은 감소
- 2011년 5월 중 전체 실업자 819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 명,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77천 명으로 15천 명 증가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2011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4월			4월	5월
전 체	817(3.3)	1,130(4.7)	868(3.5)	793(3.2)	873(3.5)	808(3.3)	1,028(4.2)	936(3.7)	819(3.2)
15~29세	320(7.6)	408(9.5)	332(7.7)	274(6.4)	323(7.6)	297(7.1)	372(8.8)	366(8.7)	311(7.3)
30~39세	202(3.3)	234(3.9)	217(3.6)	210(3.5)	213(3.5)	194(3.2)	237(4.0)	237(3.9)	191(3.2)
40~49세	151(2.3)	192(2.9)	154(2.3)	150(2.2)	165(2.5)	151(2.2)	167(2.5)	154(2.3)	139(2.0)
50~59세	104(2.2)	150(3.2)	105(2.1)	102(2.0)	113(2.3)	114(2.3)	133(2.7)	108(2.1)	109(2.1)
60세 이상	41(1.5)	146(5.8)	61(2.1)	58(1.9)	59(2.0)	53(1.9)	119(4.5)	71(2.4)	69(2.2)
중졸 이하	119(2.3)	241(5.1)	131(2.5)	125(2.3)	131(2.5)	112(2.2)	195(4.1)	114(2.2)	118(2.2)
고졸	393(4.0)	493(5.0)	386(3.8)	343(3.4)	408(4.0)	392(3.9)	465(4.6)	436(4.3)	364(3.6)
대졸 이상	306(3.2)	396(4.2)	352(3.6)	325(3.4)	334(3.5)	304(3.1)	369(3.8)	387(3.9)	337(3.3)
취업무경험실업자	36	57	46	31	35	38	52	47	42
취업유경험실업자	781	1,072	822	762	838	770	977	890	777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1. 6), 『2011년 5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27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17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1년 6월 22일 기준)는 163,456일로 집계됨.

〈표 6〉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1. 1. 1~2011. 6. 27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17	27	-
종 결	10	19	-
진 행	7 (5)	8 (3)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163,456	156,796	4.2

주: 1)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6월 22일 기준임.

2) 재파업(1건, SC제일은행), 종결(1건, 인천지역버스노조)

자료: 고용노동부.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한진중공업

- 한진중공업은 6월 현재(6월 22일 기준)까지 직장폐쇄를 계속 중임. 노사간 교섭은 중단된 상태에서 노조는 전면파업을 유지하면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음. 한편 85호 타워크레인에서 1986년 해고자 김진숙 씨가 1월 6일부터 고공농성 계속 중. 민주노총 소속의 근로자위원들은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에 항의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철야농성 중임.
- 6월 13일에는 한진중공업측이 제기한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짐.¹⁾ 이에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개인행동지침’²⁾을 전달하

1) 재판부는 “사측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어서 정리해고의 철회를 주장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진중공업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음. 가처분의 결정에서 재판부는 조합원들은 영도조선소 사내생활관에서 퇴거하되, 노조사무실과

고 조합원 개인의 손배 및 가압류는 책임지겠다고 함.

- 한편, 6월 12일경에는 한진중공업지부 조합원과 고공농성 중인 해고자 김진숙 씨를 지원하기 위해 각계인사들이 영도조선소에 들어와 집회 및 행사(소위 ‘희망버스’ 행사) 등을 개최함. 경찰은 이들 참가자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단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현장에서 연행함. 경찰은 이 집회행사에 참가한 신원이 확인된 4백여 명의 참가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 검찰 또한 희망버스 행사와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간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그러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함.
- 6월 16일경에는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김정길 전 행사부장관 등이 한진중공업을 방문함.
- 6월 20일경에는 노조 지회장과 사장 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 실시. 다음날 21일에도 지회장과 상무 간 면담 실시
- 노사는 각각 5명씩 대표단을 구성하여 6월 24일과 25일에 걸쳐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그러나 교섭안의 상당 부분에 의견접근을 이룸.
- 노조는 6월 27일, 총파업 돌입 6개월만에 총파업 철회 선언. 사측도 직장폐쇄 철회. 노사는 노사이행합의서를 체결함. 주요 합의사항은 ‘정리해고자 중 희망자에 한해 희망퇴직 처우 적용’³⁾, ‘노사 간 형사고소·고발, 진정 등의 취소’, ‘징계·인사조치 면제’, ‘노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포함) 최소화’ 등임.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퇴거에 대해서는 노조의 책임하에서 해결하겠다고 합의했고, 그 외 타임오프 및 현안문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합의함.
- 파업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현장복귀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근 ‘희망버스’ 행사 이후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확실시되면서 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임. 또한 27일, 이례적으로 공권력 투입이 아닌 행정대집행을 단행. 부산지법 집행관은 퇴거 강제집행을 위해 27일 오후 2시부터 용역직원 300명을 영도조선소에 투입함. 사내 복지관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퇴거. 6월 28일 현재까지 일부 조합원들이 노사합의에 대하여 반발하여 85호 크레인을 점거·대치중임.⁴⁾

영도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통행로 부분은 제외한다고 결정함.

- 2) 노조가 내린 개인행동지침은 개인 외출 및 외박 자제, 생활관 밖 컨테이너 등에 보관 중인 개인물품은 생활관으로 이동, 85호 크레인에 대한 사측의 접근을 방해하지 말 것, 현재부터 생활관에서 집단생활, 이동시 모자·마스크 등 착용으로 신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 등임.
- 3) 정리해고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최고 22개월치의 위로금 지급.
- 4) 6월 27일, 조합원 12명은 김진숙 농성크레인 위에서 대기 중임. 이들 12명은 6월 29일 청문회를 지켜본 후 내려오겠다는 입장이나, 김진숙의 농성해제 여부는 불투명함.

■ 유성기업

- 유성기업 노조는 5월 18일부터 파업을 이어가다 6월 14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 노조는 생산 정상화를 위해 일괄 현장복귀를 선언하였으나, 사측은 개별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조합원 가운데 근무 의사가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 업무를 복귀시킬 방침이라고 밝힘.
- 6월 27일 현재, 조합원 175명이 업무복귀한 상황임(아산공장은 복귀자 90명, 공장 가동률은 평시대비 75%임. 영동공장은 복귀자가 63명에 공장가동률 75%, 대구공장 조합원 전원(21명) 복귀, 공장가동률 100%, 인천남동공장은 복귀자 1명에 공장 가동률 100%임.
- 한편, 금속노조는 유성기업에 『현장복귀 수용 및 불법적 직장폐쇄 철회 촉구'의 건』 제하의 문서를 통해 유성기업 조합원들의 현장복귀를 수용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금속노조 충남지부·유성기업지회는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유성기업 현장복귀 선언 및 불법적 직장폐쇄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노조는 현장복귀를 위해 출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업무복귀통지서를 사측에 제출 하였으나 사측은 공장 재점거 등 현장복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 한편,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일부 받아들임.5)

■ 전국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

- 금호산업(주)은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금호고속지회와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조 금호산업고속사업부지부 2개의 노조가 병존하여 있음. 민주노총 소속의 금호고속지회는 부분파업을 진행하다 5월 30일부터 쟁의대책위원회 중심으로 파업을 지속하고 있음.
- 금호고속지회는 작년 7월에 설립되었고, 사측은 노조지회가 요구하는 노조사무실 및 비품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실질적으로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지역 언론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는 이와 같은 복수노조로 인한 노사, 노노분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도 노조에서 제명당한 전임집행부(24명)가 별도의 노조 설립을 모색 중이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복수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5) 가처분 결정 내용은 “채권자(회사)가 채무자(노조)에게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직장폐쇄기간 동안 채권자의 허락 없이 공장 및 토지 내에 출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 운수노조 전북고속지회

- 전북고속지회는 2010년 12월부터 파업에 돌입한 뒤, 올해 4월 노사간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 후 5월 2일 복귀. 그러나 현재는 임금교섭이 쟁점이 되고 있음. 지난 6월 13일, 운수노조 버스본부가 전주 시내버스 5개사에 2010년 임단협 교섭을 요구함. 그러나 전북고속측은 운수노조와 전북자동차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참을 통보한 상태임.
- 시내버스 5개사는 운수노조의 임단협 교섭요구에 대하여 합의서 이행 및 준법투쟁을 철회한 후 논의하자고 회신함. 한편,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북자동차노조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노사 합의로 6월 23일까지 조정기간 연장. 주요 쟁점사항은 임금인상률·식비·CCTV수당 등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노조는 올 2011년 3월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파업에 돌입한 이후 지난 4월 29일 사측의 최종제시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찬성 47%, 반대 53%)되면서, 다시 파업이 장기화된 바 있음. 지난 5월 2일 사측은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
- 6월에 들어서 다시 교섭을 재개하여 지난 6월 13일경, 쟁점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의견 접근을 함. 다만 노조가 단협조항 전체 일괄타결 요구에 대하여 사측이 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교섭이 중단되었으나, 6월 15일 노사는 임단협 주요쟁점에 대해 잠정합의에 이룸.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가 66.7%로 가결됨. 노조는 6월 17일자로 전원 현장 복귀

노사간 쟁점	6월 15일 잠정합의안
<정년> 노: 정년 60세로 연장(현행 58세) 사: 수용불가(단, 60세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은 가능)	<정년> 2011년 만 59세(기본급 10% 감액), '13년 만 60세(20%감액), '15년까지 한시적 시행
<성과상여금> 노: 80% 고정·20% 차등 지급(현행) 사: 고정·차등 각 50%로 변경	<성과상여금> 기능직 방식 적용
<근로시간면제> 노: 사용인원·업무 등 제한 없이 인정 사: 법령상의 범위에 한정	<근로시간면제한도> 4,000시간(풀타임면제자 1명 2,000시간, 나머지 2,000시간은 노조 임원이 사용)
※ 근로시간면제한도 4,000시간(고시 한도)에는 이견 없음	<2011년 임금> 기본급 5.1% 인상(공무원 인상률 적용)

■ KEC

- KEC 노조는 2010년 6월부터 전면파업에 돌입, 이에 사측의 직장폐쇄가 지속된 바 있음. 지난 5월 25일 파업 철회, 6월 13일 사측이 직장폐쇄를 철회함. 조합원 168명의 현장 복귀를 허용함. 한편 6월 13일자로 11명 추가 희망퇴직 신청

- 그러나 현장 복귀한 조합원에 대한 반인권적 처우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화성교통

- 노조는 유니언숍 유지·1인1차제 도입반대 등을 주장하며 2010년 12월 20일부터 파업을 계속 중임. 현재 파업 참가 조합원은 22명(파업참여 조합원은 48명이었으나 4.17 현재 26명 퇴사)
- 지난 4월 노조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상급단체를 변경한 바 있음(한국노총 전국택시노조 →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상급단체 변경이유는 한국노총이 파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임.
- 2010년 5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자 조정신청을 거친 후 12월 6일부로 전면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임. 핵심 쟁점은 유니언숍 폐지(사측은 폐지), 1인1차제(노측은 현행 2인1차제)임.
- 사측이 올 3월에 보유차량 31대를 진주제일택시·진일택시(대표자 동일인)에 매각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진주시측은 사측이 신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조합원 고용승계 등 노사 현안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3차례 반려함. 지난 6월 3일에 이르러서 사측이 조합원 고용계획서(재입사 형식으로 전원 고용승계)를 제출하자 신고서가 받아들여짐. 노조는 양수 회사에 재입사 형식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제3자 양수에 의한 포괄적 고용승계 및 노조승계를 요구하고 있음.

○ 주요 분류사업장 등

■ 금속노사

- 4월부터 금속 노사는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함. 우선 사측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50원(1.1%) 인상안 등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섭 결렬을 선언함. 노조는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경우에 한해 교섭을

노사간 쟁점	6월 15일 잠정합의안
① 금속산업 최저임금(12년 적용), 월급 1,171,110원과 시급 5,577원 중 높은 금액 적용	① 월급 156,110원<시급 1,177원> 인상
② 복수노조 도입시 별도 절차 없이 금속노조와 개별교섭 보장	② 수용불가
③ 2년 이상 상시업무에 직·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③ 인원충원 필요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전환에 노력
④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배상	④ 협의, 근로자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노력
⑤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	⑤ 협의, 노사공동위원회 결정
⑥ 유일교섭단체 인정 조항 수정	⑥ 수용불가

재개한다는 방침임.

- 6월 17일 조정신청,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현대자동차

- 지난 6월 9일 08:30경 아산공장 조합원 박종길 씨(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위원회 노동안전보건위원)가 공장 내 엔진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로 발견됨.

- 이에 노조는 현대차 아산공장 박종길 조합원이 노조의 현장활동을 옥죄기 위해 도입된 타임오프를 악용한 사측의 노조활동 탄압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산재 인정과 그에 준하는 처리 등 유가족의 네 가지 요구사항을 당장 수용하라고 요구함.

- 아산공장은 영결식을 위한 사측의 2시간 근태협조에 따라 10:30~13:30(12:00~13:00 중식시간) 전체 생산라인 일시 작업중단 후 가동. 한편, 6.15(수)~6.16(목) 노사는 단체교섭 개최

■ 발전노조 남부발전본부

- 발전노조는 최근 발전노조 내 5개 지부장이 사퇴하면서 복수노조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음(남제주화력지부, 하동화력지부, 한림복합화력지부, 부산화력지부, 영월화력지부 등 5개 지부)

- 이들의 사퇴 배경에는 퇴직연금 도입을 희망하는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부한 발전노조 남부발전본부에 대한 실망과 사업소간 원거리 인사발령(5월 31일자)을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이라고 함.

- 한편, (가칭)한국남부발전노조의 명칭으로 서울강남고용지청에 노조설립 신고(하동화력지부장 등 14명). 그러나 강남고용청은 한국발전산업노조(민주노총)와 조직대상이 중복됨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함.

- 동서발전노조(한국동서발전의 일부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별노조)는 발전노조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3월 행정법원이 복수노조가 아니라며 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함. 서울강남지청은 서울고법에 항소하여 사건이 계류 중에 있음.

■ 진방스틸코리아

- 사측이 지난 2008년 11월 26명을 정리해고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시작됨. 정리해고 사유로 매년 적자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들고 있음('05년 51억 원, '06년 41억 원, '07년 51억 원, '08년 27억 원 등)

- 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지노위, 중노위 모두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작년 5월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이어서 올해 2월 서울고법과 5월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함. 이 판결은 ‘기업의 존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임.

- 이에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6월 8일 포항고용지청 앞에서 ‘진방스틸코리아 부당 정리해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항지부는 “더 이상 노사간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협해지 및 징계 남발 등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3개 지회: 울산·아산·전주공장지회)

- 현대차 사내하청노조는 6월 현재까지 지난 파업에 대한 조합원 징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5월에는 전주지회가 징계에 반발하며 특근(토요일) 및 잔업(평일)을 거부한 바 있음. 또한 노조 간부와 해고·정직자들은 노조 사무실에서 숙박투쟁을 전개 중에 있음.
- 6월 현재까지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13개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심을 거친 후 322명을 징계함(해고 14명, 정직 10명, 감봉 284명, 견책 3명, 경고 11명).
- 더구나 지난 6월 7일에는 전주지회 노조간부 22명이 전주공장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사측(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사내하청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 불허함. 그러나 원청 조합원 300여 명과 하청조합원 150여 명의 도움으로 노조간부 22명은 사내 노조사무실로 진입함. 이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측은 노조간부 2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함.

■ SC제일은행

-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으나 진전이 없자 3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4월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86.3% 찬성).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성과없이 종료함. 5월부터 준법투쟁 돌입(정시출·퇴근, 사복착용)
- 지난 6월 22일 교섭 재개하였으나 별 성과 없이 종료함. 노사간 주요쟁점은 임금인상, 전직원 성과급 도입 및 저성과자 임금삭감, 명예퇴직 상설화 폐지, 타임오프 등임. 사측은 지난 6월 24일 이후 교섭재개를 노조에 요구하며, 수정안 제시. 특히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TFT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임금인상은 정규직 2%, 비정규직 4% 인상(노조는 총액 4%, 비정규직 8% 인상을 요구), 고용안정 보장 및 후선역제도 남용 자제, 명예퇴직제도 폐지 등을 제시한 상황임.

- 노조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2,533명 참가), 조합원들은 서울 등 7개 지역별로 모여 속초시 현대수콘도로 집결.

◆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제100차 ILO총회서 노동계 대표연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0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함. 6월 13일 노동계 대표 연설을 통해 한국정부의 반노조적 노동 탄압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
- 이날 대표연설에서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정부가 ‘전임자 임금’과 관련하여 법률로 금지할 입법적 관여대상이 아니라는 ILO의 권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강제 교섭창구 단일화로 소수노조와 신생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철저히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함.

■ 민주노총, ILO 가사노동자 협약 채택 환영 성명

- 국제노동총회(ILC)는 2011년 6월 16일 노동자·사용자·정부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총회를 열어 가사노동자를 위한 ILO협약 189호를 채택함(찬성 396, 반대 16, 기권 63).
- 민주노총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비공식 영역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ILO 협약 189호 채택을 열렬히 환영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논평을 낸 바 있음. 한편, 민주노총은 한국정부 또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ILO 협약 189호 채택을 찬성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비준을 아울러 촉구함.

○ 민주노총,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한 성명 발표

- 지난 5월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발표함.
-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의 결과’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도급대금에 ‘사회보험’, ‘최저임금’ 등의 변동요소를 반영되도록 하고, 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배치 등을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시에도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협력을 원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였음. 또한 합리적 사내하도급을 위한 조치로서 원사업주로부터 시설·부품 및 소모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거나 도

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방법·작업량·작업속도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수급사업주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임.

-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불법과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이 ‘불법과건의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내하도급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

◆ 경영계 동향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 앞서 민주노총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에 대해 경영계 또한 ‘수용불가’ 입장을 발표함.
- 경총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논의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이 제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침. 특히 공익위원안에 제시된 “원청기업이 수급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와 연대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보장부터 고용안정까지 사실상 사용자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해 줄 것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의 본질이 무시된 채, 원청기업에게 사내협력업체 근로관계에 개입토록 권고한 것으로, 시장경제 체제하의 계약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함.
- 또한 원청기업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원청기업 노사협의회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것은 자칫 막연한 기대심리를 가지게 하여, 현장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며 우려를 표명함.6)

◆ 정부, 국회 동향

○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한진중공업 노사 출석요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진중공업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한진중공업 노사를 전원회가 열리는 22일에 출석시키기로 지난 6월 17일에 간사협의회와 전체회의를 통

6) 공익위원안이 제시된 이후 경총은 “공익위원안은 정부가 제시한 불법과건 및 합법적인 도급의 판단 지침과 상당부분 충돌하고 있다”고 함. 과거 현대자동차가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휴게실 제공, 통근 버스 이용, 구내식당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가 직접고용의 소지를 지적받은 바 있어, 오히려 공익위원안이 사내하청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문제를 유발·확대시킬 뿐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해 결정함.

- 환노위는 한진중공업 노사가 자진 출석을 거부할 경우, 27일 한진중공업 파업사태에 대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당분간 한진중공업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지난 16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진중공업을 찾아 노사 모두에게 자율 해결을 도모하되, 불가피할 경우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친 바 있으나, 7) 6월 27일 총파업 철회로 공권력 투입은 사실상 희박하게 됨.

○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유성기업 아산공장 방문

- 6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동영(민주당), 홍영표(민주당) 의원 등이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유성기업 아산공장을 방문함. 두 국회의원은 회사측을 만났으나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은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6월 14일에는 국회에서 금속노조와 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노조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현장복귀 선언을 수용하고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요구함.

○ 고용노동부,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시 근로시간 관련 부가조사 병행 계획

-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를 하면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부가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유성기업 파업과 관련해 교대제 실태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부가조사에서는 교대제 실시 여부 및 시행 형태, 교대제를 통한 주당실근무시간을 비롯해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휴가 현황, 근로시간특례,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등을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임.
- 정부가 교대제 실태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밀 조사는 사실상 처음임. 이 조사를 통해 제조 및 운수 업종의 일부 사업장을 패널로 선정, 장시간 시계열 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임.

○ 고용노동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부당노동행위 엄중조치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소속 임원(기술안전이사)

7) 이미 경총은 6월 12일 『한진중공업 불법파업에 따른 손실액이 158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5월부터 수주잔량이 완전히 끊겼고, 사외작업 및 납기 지연에 따른 비용, 보상금 등 손실액이 3월 말 기준으로 158억 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노조가 합법적인 구조조정 철회만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불법투쟁”을 하고 있어 한진중공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권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불법 점거농성을 해산하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불법투쟁을 지원하는 세력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에 불출마할 것을 중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에 따른 엄중 조치를 지시함.8)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서울관악 고용노동지청)는 관련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결과 범위만 사실(부당노동행위)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서 인사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선출

- 난항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지난 6월 3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됨. 노·사·공익위원의 투표로 박준성 공익위원(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문화선진화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함.
- 한편,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4월과 5월에 개최된 전문위원회(임금수준 및 생계비 전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할 예정이다.9)

○ 고용부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는 6월 7일부터 2주간 1,5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
-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매일노동뉴스 설문조사: 국민 61%, 복수노조제 시행 모르고 있어

- 노동일간지인 매일노동뉴스가 창간기념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7월부터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800명과 양대 노총 대의원 800명에게 설문한 결과 복수노조 제도 시행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8.8%에 불과한 반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이 61.2%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4.8%) 지역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광주·호남(28.3%) 지역은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음(제81조 제4호).

9)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됨.

령대별로는 20대의 인지도가 25.7%로 가장 낮았음.

- 또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사업장에 새로운 노조가 ‘생길 것이다’(51.4%)라는 대의원들의 응답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45.4%)라는 응답보다 더 많았고, 복수노조 제도 시행 후 ‘6개월~1년 이내’ 새로운 노조가 생길 것이라는 대의원들의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음. **KL**

(김가람,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